

<b>이슈 리포트</b>	<h1 style="margin: 0;">모심의 눈 살림의 길</h1> <span style="font-size: 1.2em; color: #0070C0;">제16호</span>
발행일 2017년 12월 22일    발행인 황도근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www.mosim.or.kr	

## 2018년 경제동향 및 전망

정규호<sup>1)</sup>

### ■ 종합 진단

- 2018년 세계경제는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하지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 유출 문제로 신흥국들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주목할 점은 강대국들이 힘으로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 향후 세계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는데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일-러 강대국들이 정치·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긴장 상태로 있는 가운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존재는 갈등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각자도생의 논리가 국제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2018년을 양식 있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협력, 연대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2018년 한국경제는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정책의 성공 여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수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으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 특성상 이것이 고용과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 오히려 FTA 재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업과 먹거리 안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다 양극화 확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가계부채

1)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급증과 일자리 불안 등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사라지면서 지출을 줄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낭비를 줄이고 생활을 내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뢰에 기반한 공존 공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생활협동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치적 노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가운데,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가 정치적 기득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사회적 구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치를 적극 견인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 ■ 2018 세계경제 흐름

- 2018년 세계경제는 소폭 상승에 대한 기대 속에 불안정 요인들이 잠복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2010년대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왔는데, 내년(2018년) 세계경제는 올해(2017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내년 세계경제의 소폭 성장을 기대하는 요인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찾고 있음.

〈표1〉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추정)
세계	3.9	3.2	2.9	3.6	4.0	3.1	3.4	3.6
선진국	1.7	1.5	1.2	2.1	2.5	1.6	1.9	2.0
신흥국	6.2	5.0	4.5	5.1	5.4	4.1	4.5	4.8

- 하지만 세계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금리인상: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통화긴축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유로존의 긴축 전환이 진행되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런 세계적 통화긴축 흐름은 국내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1월말 OPEC 총회에서 OPEC 산유국들이 2018년 12월까지 9개월 원유 감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트럼프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EU의 브렉시트 협상 등 경제적 요인과, 트럼프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이후 나타나는 중동지역 갈등, 테러, 북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요인, 기상이변, 지진, 괴질 등 대규모 자연재해 요인 등이 있음 .

- 한국경제와 밀접한 주요 국가의 경제 전망

**【미국】**

- 트럼프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2018년에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한중일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 개선, 정부 차원의 국내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치적 요인 등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과 소비 증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스스로의 성장을 제약시킬 수도 있음.
- 한편,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중단시킨 채 석유 등 전통에너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의 틀에서 이탈하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유로존】**

- 2018년 유로존의 전체 경제는 2017년에 비해 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유로존 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임.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와 2017년 3월 공식탈퇴를 선언 이후 진행하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은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임.
- 이 외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테러와 난민 유입에 따른 국가 간 갈등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부채 급증 및 은행의 부실화 문제도 있음.

**【일본】**

- 일본의 실업률이 3% 아래로 떨어져 완전고용 수준 가까이 갔으나, 2018년 일본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민간소비 활력도 약해질 것으로 내다봄.
- 일본 경제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들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을 주부의 노동참여와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

- 2018년에 시진핑 정부가 2기(2018~2022년)를 시작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 만큼 경제적 기반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이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억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긴축정책으로 자본이 유출될 경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중국은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부채 증가(국유기업,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에 따른 재정 부실과 지역 및 도농 간 격차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를 해결에 집중하는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임.
- 한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신에너지차 비중을 8%로 하는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수입대체산업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우리나라 수출경제와 국내 관광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 한국경제 전망

### - 2018년 한국경제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전망과는 별개로 내년도 한국경제는 전체적으로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음.
- 정부는 2017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내비치고 있으나, 국회예산처와 민간연구기관들은 201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음.
- 2018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의 차이는 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실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

〈표2〉 주요 기관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16	2017	2018
정부	17년 7월	2.6	3.0	3.0
국회 예산정책처	17년 9월	2.6	2.9	2.8
한국은행	17년 7월	2.6	2.8	2.9
LG경제연구원	17년 7월	2.6	2.9	2.7
현대경제연구원	17년 9월	2.6	2.7	2.5
IMF	17년 10월	2.6	3.0	3.0

- 현 정부 정책의 성과 여부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비 심리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활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 4천명,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고, 노인 일자리도 80만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계획도 발표함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가계소득 증진, 소비 촉진의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2018년 예산안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구직 촉진수당,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이 신설·확대되고, 공공 부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함.
  - 다만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안게 되고 이것이 사회와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에 건설 및 설비 투자 확대가 미친 영향은 상당함.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총부채상환 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가계부채 급증과 공급과잉 확대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내놓게 됨.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조치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고령화와 함께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커진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효과가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으나 이것이 고용 및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세계경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교역량 증대에 따른 수출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하지만 수출 총량의 증대가 국내 경제 각 부문간(대기업-중소기업, 도시-농촌 등) 균형 발전과 고용 및 소득의 실질적인 향상과 긴밀히 연결되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17년에도 한국경제의 수출 실적이 양호했는데, 자본 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분야가 주요

부분을 차지했음. 문제는 이들 산업이 가진 특성상 고용유발 효과는 낮고 가계소득과의 연계성도 낮다는 점임.

- 한국경제에서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 국내정치에서는 탄핵정국 거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내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물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개개편과 선거 결과, 개헌 등이 정치적 불안정을 키울 수는 있음.

· 중요한 것은 2018년 한국 정치 리스크의 주요 요인은 국내보다 북한과 주변 4대 강국(미·중·일·러)과의 국제적 관계에서 비롯될 전망이며, 이것이 국내에 이념갈등을 점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확대시키면 경제 영역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경제생활과 소비의 위축에는 소득감소 외에 소비심리의 위축이 미치는 영향도 큼

· 가계소득 증가 속도 보다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가계의 소비 부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현상은 소득계층 전반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 이전에는 고령층(60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청장년층(30대 이하)과 중년층(40~50대)을 포함해 전체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음.

· 가계의 소비성향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 불확실한 경제: 미래의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임.
- 가계부채 증대: 미래를 저당잡힌 불안정한 생활 구조 속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
- 일자리 불안: 성장과 고용이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실직과 이직의 증대로 인한 고용불안이 소득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
- 고령화 추세: 평균 수명이 높아진 반면 의료비 등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세대가 늘어 나면서 소비가 위축
- 주거비 부담: 전월세 가격 급등 등으로 주거비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 보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이 소비를 위축
- 양극화 심화: 소득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취약해져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

- 주요 영역별 전망

【실업률】

- 전체적으로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3> 기관별 실업률에 대한 전망

	전망시점	2016	2017	2018
정부	17년 7월	3.7	3.7	3.5
국회 예산정책처	17년 9월		3.8	3.8
한국은행	17년 4월		3.8	3.7
LG경제연구원	17년 7월		3.8	3.7
현대경제연구원	17년 9월		3.8	3.8

-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2017년 취업자는 전년 보다 늘어났고, 2018년에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실업률 감소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임. 물론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침체되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실업률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음.
- 한편, 전체 중에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7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37만여 명으로 8.6%의 실업률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특히 20대 후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표4> 실업률 추이 비교(실제 및 체감실업률)

구분	2015	2016	2017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실업률	3.1	3.4	3.2	전체 체감실업률	10.5	10.0	10.4
청년 실업률	7.4	8.5	8.6	청년 체감실업률	20.9	21.1	21.7

【가계부채】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 1400조를 넘어섬. 연평균 가계부채가 2007~2014년에 60조원이었다면 2015~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129조원으로 늘어남.
- 가계부채의 질도 매우 나빠져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치분소득 증가세를 넘어섬.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비율이 12.5%로 1년 전 보다 0.7% 상승해 1999년 후 최고수준에 이룸.
- 가구당 부채는 평균 7,022만원으로 1년 만에 303만원(4.5%)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 불안에 소득이 적은 30대 미만 청년층의 부채는 전년에 비해 41.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과도한 가계부채 속에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가정 경제는 위기로 내몰리게 되고 소비위축과 함께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됨.
-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청약·세금·대출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음. 특히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신DTI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함.

**【최저임금 인상】**

-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함. 이러한 인상률은 1991년 18.8%, 2001년 1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표5>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원)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인상률(%)	2.8	5.1	6.0	6.1	7.2	7.1	8.1	7.3	16.4

-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으로, 이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임금상승에 따른 경영적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음. 정부는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게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음.

**참고 자료**

- 도서: 이근·박규호 외 경제추적연구소. <한국경제 대전망(2018)>. 21세기북스.
- 보고서: KTB투자증권. <2018년 경제·금융시장 전망>(2017.11.13); LG경제연구원.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2017.10.12);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7.9.28);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경제주평>, 773호(2017.12.8); 현대경제연구원,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경제주평>, 767호(2017.10.27.);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2017.10.10)